일본군위안부 문제

To. 조선大 총여학생회.

< 나눔의 집 소개>

* 나눔의 집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성적희생을 강요당했던 생존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 나눔의 집 건립은 92년 6월 결성된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원주 스님)에 의해 정신대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불교계 및 사회 각계의 모금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 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나눔의 집 개소식을 갖고 출발하여 명륜동 혜화동을 거쳐, 95년 12월, 독실한 불자께서 기증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소재 650평의 대지에 180여평(생활관 두 동, 법당 및 수련관으로 사용하는 근린생활 시설 한 동)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은 매주 한글수업과 함께 그림으로 과거 일제의 정신대 만행에 대한 진상을 역사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정대협이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를 통하여 일제의 정신대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나눔의 집은 정신대의 실상과 역사적 진상규명 운동의 일환으로써 (주) 대농의 지원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가칭)을 건립 공사중입니다. (1997년 10월경 완공 예정. 1998년 3월 1일 개관 예정)
*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을 통하여 길이 후손에게 정신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97년 9월 현재 나눔의 집에는 아홉분의 할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며 원장 혜진 스님을 비롯하여 3명의 상근봉사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후원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장이용에 대한 후원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회비의 원활한 납부를 위하여 나눔의 집에서는 지로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약정하신 후원금을 적어 보내주시거나 2천원 이상을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록하여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로용지가 없더라도 은행에 가서서 지로번호 7628171을 기재하시면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23-01-0537-101	농 협	053-01-231851
우 체 국	102327-0019430	제일은행	100-20-211271
조흥은행	390-04-180199		

예 금 주 :나눔의 집(배영철)

지로번호 : 7628171

정신대(挺身隊)문제란 무엇인가?

1. 정신대(挺身隊) - '일본군위안부'인가? '종군위안부'인가?

현재 매스컴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귀에 익은 용어는 '정신대'이다. '정신대(挺身隊)'는 이름 그대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란 의미이다. 이 용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일제시기 조선에서 1940년 이후의 신문기사, 특히 친일신문인 「매일신보」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여자에게 '정신대'는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만드는 여자근로정신대'를 의미했지만, 이들 중에는 일본군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군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정신대'와 '여자근로정신대', '군위안부'는 사실상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당시 자료속에 '위안부(慰安婦)'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역사적 용어로서 '일본군에게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잠정적으로 '군위안부'나 '일본군위안부'라 부르고 있다.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용어는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또한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는 용어로서 유엔(UN) 등의 국제적인 석상에서는 '성노예',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다.

2. '정신대' 문제의 '쟁점화' 배경

일본은 그 동안 전후배상에 대해 1951년 최종타결된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이에 따른 개별국가간의 배상조약 또는 평화조약체결과 그 이행으로 전후배상은 모두 끝났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또한 1965년 '한일기본협정'의 서명(김종필-오히라)은 "과거 일제치하의 일본관계 국가배상에 있어서 한국정부와 그 개인의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기된 것이며 더 이상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협정 내용중에는 '정부의 청구권' 뿐만아니라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주장이다. 물론 협정 이후에도 정신대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인식은 미미했고 무관심을 이어갔다.

해방후 40년이 넘도록 침묵되었던 이 문제가 새삼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0년 1월 「한겨레신문」에 1980년대부터 정신대의 발자취를 소개해온 윤정옥교수의 「취재기」가 실리게 되면서 부터다. 그후 정신대문제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중심이 되어 여성계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노태우 前대통령의 방일 전인 1990년 5월 18일, 한일 양국에게 전후 처음으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윤정옥교수와 여성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정신대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신대연구회'를 조직하게 된다. 이 연구회는 같은 해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3. '진상규명 및 국가배상촉구운동'의 전개과정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본질은 "일본 황군의 '性 위안'을 위해 군사정부가 군대위안소를 제도화하여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전선으로 수송하

며 체계적으로 성노예를 강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의 궁극적 목표와 과제는 "여성을 소위 '성노예'로 만든 군부나 국가권력의 만행이 다시는 인류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그 진상을 알리며 교육"하는 데 있다.

이 운동은 대체로 국내외의 한머니들 증언활동과 활동가들의 강연활동 및 대중 홍보활동, 일본정부의 반응, 일본 시민단체와의 연대, 유엔활동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여성인권문제의 부각, 배상요구운동, 생존자 지원활동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가 조직적인 운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6공화국 시절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전인 90년 5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한일 양정부에게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6일에 일본정부가 "민간업자가 데리고 다녔다"고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한 발언이 한국에 전해지자, 10월 17일에 37개의 여성단체가 항의를 담아 한일 양정부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11월 16일에는 윤정옥교수(이화여대)을 대표로 '정대협'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91년 8월에는 김학순할머니가 해방 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운동계에 본명을 밝히셨다. 그리고 정대협이 주관하여 일본대사관 앞에서 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한 '수요집회'는 <나눔의 집>에 사시는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여러 할머니들과 한국정신대연구회 외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석하고 있다.

1992년 8월 9일부터 2주간 정대협에서 4명의 대표가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의 심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 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일본인 인권변호사인 토츠카씨가 큰 역할을 했고, 그 후에도 그는 국제적인 연대에 많은 협력을 했다. 1996년 4월엔 일본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스와미씨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것은 일본정부에 큰 압력이 되어 일본의 기만적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반대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내에서는 10월 18일에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결성되었고,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다. '정신대할머니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시민연대의 모금운동은 시사주간지 '한겨레 21'과 함께 정신대할머니 운거래돕기운동으로 97년 5월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4. 정신대할머니들의 생활실태 및 최황

(1) 경제적 지원상황

1992년 '정신대지원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정신대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정부에 신고한 할머니들은 97년 5월 현재까지 157분이고 돌아가신 분이 23분이다. 정부의 지원은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생활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대협과 국내외 여론의 영향으로,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된다. 1993년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그 해 8월부터 일시불 500만원과 월 15만원 생계비 지원, 의료 혜택,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의 내용으로 된 법이 시행되었다. 1995년에는 매달 20만원이, 1996년에는 25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날인한 살림에 약값이 모자라 할머니들 중에는 새마을 취로사업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다. 지역에 따라 시 차원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계해서 지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력하여 97년 1월부터 정부의 생활안정지원금이 50만원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80%의 할머니들이 결혼도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

시며, 결혼을 하셨더라도 '과거'가 밝혀져 피폐을 당하거나, 새처로 들어갔다가 남편사망 후에는 전처 자식들에게서 나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신고하신 할머니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은 평수의 인대아파트에 사시거나 일부는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살고 계시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익전하다.

(2) 의료 지원상황

현재 정신대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경험이 남긴 후유증으로 인해 '산부인과', '신장질화', '심장', '정신질화(예: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등), 노인병 등을 앓고 있으며 정기적 병원진료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아직도 50%의 생존자가 50년전에 일본군에 의해 감염된 매독균을 이식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행히 현재 서울중앙병원(현대기업 계열)에서 무료진료를 해주고 있지만 거리가 먼 관계로 실실적으로 급한 경우 중앙병원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할머니들은 대부분 오래된 지병과 함께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살펴드릴 복지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의 경우는 10분 정도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이라, 거동하기도 힘드신 상도로 심신 몸이 불편해지시는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5. 운동의 성과

(1) 일본정부의 입장변화

1990년 6월 일본국회에서 일본정부는 국가개입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 국가개입을 지인하게 되었으며, 지세진상조사를 거쳐 1993년 8월 강제성을 인정하게 함.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국가책임은 회피하는 '민간기금'을 마련,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정신대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이용해 계속적으로 회유하고 있음.

(2) 한국정부의 대응을 끌어냄

정대협 등 민간단체와 국내외 여론의 영향으로 1991년 7월 실무대책반을 조직, 1993년 5월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 국회를 통과시킴.

(3) 국제적인 문제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함

한국을 비롯 국제사회의 꾸준한 연대성과로 1996년 3월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위안부문제권의문 채택함. 일본의 온갖 로비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1996년 4월 마침내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의 세보고서를 채택토록함. 현재 위안부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중임.

6. 향후 제기되는 문제와 우리의 과제

정대협이 전개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목표는 '우리 민족 여성 및 아시아 여성들이 일본의 성노예로서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며, 한일관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키, 그리고 인류 전쟁사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된 성노예와 집단강간의 만행이 재현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한국정부 및 일본정부 상대의 진상규명과 범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현재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 90년 이후 6년이 넘는 동안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할머니들의 증언과 일본학자가 찾아낸 자료, 그리고 다양한 국제적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국제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 제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적 압력에 밀려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국민기금의 내용은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문제의 진실과 실상을 역사적 사실로서 계속 연구하여 그 전모를 밝히고, 역사적 사실과 실천운동이 차세대를 위한 산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료관을 설치하고 전시, 보존하여 각 예술분야에서 문화운동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할머니들이 낭낭한 모습일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곁에 지켜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지원하는 활동은 지속해야 할 것이다.

7. 정신대문제 관련 단체 소개

'정신대'문제와 관련된 단체 중 대표적인 단체는 운동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 복지단체인 '나눔의 집', 그리고 연구단체인 '한국정신대연구회'가 있다.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성봉희)

정신대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하고 활동해온 대표적 단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 11월에 발족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진상조사 활동과 대 한국, 일본 정부 활동, 아시아연대 활동, 자료발간 활동, 생존자복지 활동, 증언집회나 영주귀국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는 운동단체다. 현재 미주지역에도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정대협을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다. ☎ (02) 365-4016

▲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인 복지시설이다. 나눔의 집 건립은 92년 6월에 결성된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월주)에 의해 할머니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불교계 및 사회 각계의 모금에 의하여 추진되어, 현재는 조계종과 후원회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시는 강덕경할머니(97년 2월 2일 별세)와 김순덕할머니가 그려 그림은 국내외에 전시되어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할머니들은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정대협이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96년 12월에는 경기도 광주에 터를 잡고, 97년 3월 1일에는 정신대 전시관 건립기공식을 마쳤다. 앞으로 전시관이 완공되면 할머니들의 유품전시, 그림 전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 (0347) 768-0064

▲ 한국정신대연구회 (회장 정진성)

한국정신대연구회는 1990년 7월에 조직되어,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작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 단체이다. 90년 11월의 정대협 발족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금까지 증언자 발굴과 정신대 관련 기록과 문서들을 찾아내고, 피해자들의 증언 채록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일본에서 하는 순회집회나 국내의 대학과 집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기도 한다. 증언집으로 『증언집 1;강제로 끌려간 조

선인 군위안부들』(1993), 조사집으로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995), 단행본으로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가 나와 있다. 증언 2집이 곧 발간되고, 현재 증언 3집을 위한 채록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8. 정신대문제 관련 참고자료 (보다 관심있는 분을 위하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1』**, 1993, 한울출판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엮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995, 한울출판사
- 윤정옥 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1997, 역사비평사
-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1997, 아세아문화사
- 한국정신대연구회, **『증언집 2』**, 1997, 한울출판사
- 기타 『정대협 소식지』, 『나눔의 집 소식지』, 『한겨레 21』 등

별첨 / '정신대' 관련 주요 사건일지

연 대	내	용
1965	한일기본협정 체결 (김종필 오히라)	"과거 일제치하의 일본관계 국가배상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와 그 개인의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포기하며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함.
1990. 1	한겨레신문 '정신대기사' 연재	한겨레신문에 이화여대 윤정옥교수의 '정신대 취재기' 연재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
1990. 5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발표	노태우 대통령의 訪日을 앞두고, 한일 양국에게 戰後 처음으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1990. 5	노태우 대통령 訪日	한일 정상회담
1990. 6	"일본업자가 데리고 다녔다" 일본정부 입틀	"일본국가와는 관계없으며 일본업자가 데리고 다녔다"며 정신대문제의 일본군 관여를 부정하는 망언을 주장함.
1990. 7	정신대연구회 결성	정신대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화여대 윤정옥교수를 중심으로 여성학 전공 대학원생들로 '정신대연구회'를 결성함.
1990.10	37개 여성단체 한일양국에 '정신대'관련 공개서한 전달	일본정부의 '망언'이 진해지자 국내 37개 여성단체가 항의의 뜻을 담아 한일 양국에 '공개서한'을 전달함.
1990.1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정신대 진상규명, 생존자 복지활동, 아시아지역 연대활동 등 각종 운동을 통해 정신대문제의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자 결성된 대표적 단체임.
1991. 8	김학순 할머니 최초 공개증언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은 정신대 피해자로서 최초의 공개증언으로, 이후 정신대문제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킴.
1992. 1	수요정기집회 시작	1월 8일 수요일 첫 '수요정기집회', 정신대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기집회를 '매주 수요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에서 갖기로 결의함.
1992.10	<나눔의 집> 개원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송월주)가 주축이 되어 각계의 뜻있는 시민들의 정성으로 흩어져 사시던 할머니들을 한데 모셔 '정신대할머니들의 삶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을 개원함.
1993. 5	'정신대 지원특별법' 임시국회 통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생활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대협의 국내외 여론의 영향으로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임시국회 통과, 같은 해 8월 지원금,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분양 등의 지원 시작됨.
1995.12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에 영구입주	민간운영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한 독지가의 부지 기증으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영구히 '삶의 보금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6. 3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위안부문제결의문 채택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함.
1996. 4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위안부문제보고서 채택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개념화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성격을 부각, 일본정부에 법적인정, 공개사과, 법적배상, 교과서 개정,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됨.
1996. 7	일본 국민기금 반대 일본 순회집회 참석	한국, 필리핀, 대만, 중국 등지의 정신대할머니들과 관계자들이 일본 전국을 순회하며 일본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국민기금모금을 반대하는 집회를 전개함.
1996.10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결 성	일본의 '국민기금 반대'와 '특별법 제정'를 위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범국민 조직을 결성함.
1997. 3	'정신대전시관' 착공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부지에 '정신대전시관'을 착공, 향후 정신대문제의 사료보전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키위한 터전을 닦음.

0/3
<정신대>

뉴스제공시각 : 04/08 19:17 출처 : 한겨레신문
제목 : [북한돕기] 정신대할머니 '북녘사랑' 꼬깃꼬깃 모은돈 성금으로

"죽어가는 동포가 있는데 밥이 어디 넘어가겠어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때 굶주리던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 일본군대위안부(정신대) 할머니들은 식량난에 고통을 받는 북 녘 동포를 얘기하다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8일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에 사는 정신대 할머니 8명 이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모은 성금 87만원을 들고 <한 겨레>를 찾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고난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북녘 동포의 배고픔을 눈물로 껴안고 나선 것이다.

김복동(72)씨는 며칠 전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겨레 >에 실린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아 밥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게 붙잡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를 떠돌며 정신대 생활을 하다 지금까지 혼자 산 김씨는 "종교단체와 후원회원들의 성금 으로 살아가는 처지지만 주리는 동포의 사정을 알고도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 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한겨레>에 실린, 북한 노인이 나무뿌리를 캐서 죽을 끓 이는 사진을 보고 '나눔의 집' 모든 할머니는 일제시대와 한국전 쟁 때 고생한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밥을 굶지는 않고 살고 있으므로 남을 도울 여력이 있 다" 며 8일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 선뜻 할머니들끼리 성금을 모으 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김씨는 "죽어가는 동포가 있는데 하루 1끼 먹지 않고 한달 용돈 안 쓰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며 "북한이 어렵다는 이 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 고 말했다 .

김순덕(77)씨는 "형편이 닿는 대로 몇만원씩 정성을 모았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 부끄럽다" 며 "작은 힘이나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는 혜진(33) 스님은 "할머니들 이 하루 3끼 중 한끼를 줄여 남은 쌀을 북한으로 보내자는 이야기 도 하셨다" 며 "이번 할머니들의 뜻있는 성금이 북한 동포를 돕 는 데 좀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 다.

나눔의 집에는 92년부터 정신대 할머니 8명이 종교기관과 후원회 원의 도움으로 함께 살고 있다. 권혁철 기자

일시불

민간위로금 철회 및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규탄대회 제안서

정신대문제를 둘러싼 정세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기만적인 민간위로금 지급 강행, 정신대문제 조기해결과 왜곡축소보도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5월 16일 동경에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일명 민간위로금)은 동경주재 한국기자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선전하고 기자들을 일본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아시아연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대협 권희순씨가 동경에서 아시아 피해국 민간단체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활동중이다. 또한 일본은 도요타에 있는 450여개 기업체에 편지를 발송하여 면책 등을 미끼로 기금모금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대협은 7월에 일시불로 지급 예정인 민간위로금을 무마시킬수 있는 방도에 고심중이다. 현재 국내 회원단체에 국내 모금을 제안한 상태이고 범국민적으로 벌여낼 시기를 정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정부에게는 할머님들의 생활지원을 강화할것에 대한 요구로 전여대협과 함께 국회청원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후원사업에 대한 고민이 진행중이다. 더불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일본의 자치노조와 양심적인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한,일공동 모금을 벌여 일본정부가 벌이고 있는 민간위로금을 무력화시키고 할머니들의 생활은 우리가 보장할테니 일본은 범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책임(배상,공식사죄)을 다할 것을 촉구, 규탄할 것이다.

전여대협에서는 3, 4월 지역에서 벌여냈던 정신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집중해 나가면서 정신대문제정세를 주도하며 7월 기만적인 민간위로금지급을 결사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투쟁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그러한 일본정부에게 압력행사 할수 있도록 (정신대문제에 대해 성실히 다루고 공식입장을 발표, 지금 진행중인 민간위로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 국회청원서명을 벌여내고 투쟁을 해나가면서 강제해내자. 더불어 100만과 공식적으로 출범식자리에서 중간총화를 해내고 29일 실천투쟁으로 정부에게 압력행사, 일본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킬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신대문제의 완전해결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이후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투쟁판 흐름 몇차집회?

일시: 29일 이른 11시 30분
장소: 일본대사관앞 (3호선 안국역 하차)
집회명: 민간위로금 철회 및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규탄대회

일정:풍물패 공연
- 집회시작 -사회자
- 묵상 (돌아가신 정신대할머니의 넋을 기리며)
- 노래 (악단)
- 기간 정신대투쟁보고 및 현정세 -정대협
- 정치연설 (일본정부 규탄 및 전여대협투쟁총화) -지역의장中
- 노래
- 의장단 소개 및 전여대협의장 인사

일시불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하자.

항의서한 전달 -정대협대표,전여대협의장,지역의장2인,학우2명
기다리는 동안 결의다지는 시간 -지역의장中
보고 및 투쟁결의문 채택 -전여대협의장
실천투쟁 -
시민선전전 (행진) -대열지도

정리집회 -사회자
정치연설 (한국정부 정신대문제 해결촉구) -
투쟁총화 -각 지역별로 대표1인
참가학우 한마디
이후 투쟁공유 및 결의

준비:피켓 (2인1개꼴), 지역당 플랑 1개, 서명준비, 흰천준비

지역 조직화 지역 조직화

1. 정치사업을 내실있게 전개하자.

한총련 출범식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직화하기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원채우기 식의 막무가내의 조직화는절대로 아됩것입니다 이번 29일 투쟁에 대하 의의를 잘 설명하고 일본에 대한 분노와 할머님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들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정신대문제에 대한 자기 결의를 세워내었을 때 29일 투쟁은 힘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2. 투쟁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한총련 출범식과 전여대협 출범식에 참가하는 학우들을 최대한 교양하고 결의를 모아낼 수 있도록 출범식장을 조직화의 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특히나 전여대협 출범식 결의와 교양의장, 25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선전에서 지역여대협별, 대학별 선전의 공간을 이용합시다.

3. 여학일꾼의 선봉에서 결의와 지역여대협의 집단적 결의를 모아냅시다.

'전국에 있는 여학일꾼을 다 모아보면 얼마나 될까? ' 여학일꾼들조차 결의하지 못하면서 학우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할 수 있겠습니까? 간부들 스스로 학우조직화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냅시다. 또한 각 대학별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여대협별로 집단적인 상경투쟁(예 : 버스등으로 함께 상경. 수련회의 분위기를 낸다면...) 으로 지역 여대협으로 간부들의 결의를 드높였으면 합니다.

중앙:유인물,무대플랑,흰천,투척물,화** 조형물